

# “원전 대신 LNG 복합화력발전소 짓자”

### 영광군, 한빛 1·2호기 폐로 대비 중간보고회서 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 줄어든 세수 확보·고용창출 효과...환경단체 “탄소중립과 배치” 지적도

5년앞으로 다가온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廢爐)하는 대신,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한빛원전 폐로로 줄어들게 될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라는 게 자치단체 입장이지만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원전 폐로에 대비한 지역 신산업육성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는 한빛원전 폐로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원전세 감소에 대응할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광이 향후 미래에너지 도시로 육성,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원자력 대신,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게 보고회 골자다.

당장,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로 줄어드는 세수 확보 및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으로 국비 등 1조원을 들여 LNG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빛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 누적액(2013~2017년)만 2659억원에 달했다.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사업자지원금(2017년 기준)도 영광군 세입원의 50%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빛원전이 최대 3·4·5호기까지 가동을 멈췄음에도, 확보한 세수가 412억원에 달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폐로로 발생할 이같은 손실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업비(국비 4878억원, 지방비 4878억원, 민자 244억원)는 전남도와 정부에 요청기로 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하면 원전 1·2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변지역지원금, 지방세 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게 영광군 구상이다. 영광군은 LNG발전소가 지어지면 견여들일 수 있는 세수(2030년 기준)는 941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264.5억원, 지방세 677.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LNG 복합화력발전소(950MW)를 통한 수소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미래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영광

군이 그리는 '큰 그림'이다. 지역 주민들의 발전소 사업 참여를 통한 생산 유발효과도 2조원에 달하고 건설인력과 상주 인력을 포함하면 약 1만 1000여 명의 고용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단체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NG발전은 정부의 탈(脫) 원전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정책으로 오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또 원전 가동 중단 이후에도 발전소 내 보관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사용후핵연료(지방세)를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고서에 담았다.

원전 도시가 아닌, 신재생 첨단 에너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관리리조트를 조성하고 영광군 하사리(224.433㎡, 29만9397㎡)·두우리(4만3689㎡) 등을 수소발전시설 또는 신산업 소재 부품장비공장, 가족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3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밑그림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빛원전 폐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로수 관리 실기시험 광주 북구 효죽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북구 가로수 및 가로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이날 시험에는 공원관리와 단순인력 등 총 46명 모집에 남성 40명, 여성 30명이 응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설 명절 ‘택배 대란’ 오나

### 택배노조 총파업 예고 속 우체국 노동자들도 과로 예방 대책 마련 요구

설 명절을 앞두고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택배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체국 노동자들도 명절 물량 증가로 인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전남 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명절 특별소통기간 우정노동자 과로사 및 안전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체국 집배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물량 증가에 설 명절 선물 배달 급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택배연대노조의 파업까지 예고되는 만

람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택배 물량으로 우체국에서도 밤새워 분류 작업을 하고 한파에도 일몰시간이 다되도록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배수수료 절감을 이유로 상당한 물량을 집배원에게 떠안기는 상황에서 설 명절과 1월 택배노조 파업까지 맞물리게 되면 우체국 집배원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토요일택배 완전폐지 ▲설 명절 배달인력 증원 ▲일정 중량 이상의 무거운 소포 배달 중단 ▲실질적 초과근무 인정 ▲코로나

나19 안전장비 보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 호남지부는 이날 광주CJ대 한동운 송안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명절 택배 물량 증가에 대비한 분류 노동자 인력 총원 및 야간 배달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책이 미흡할 경우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용 전남지방우정청노조 본부장은 “공적 물류 배달의 보루로 파업 등 강경한 입장은 보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中 지진 여파 광주·전남서도 감지

새벽시간대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지진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21분께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제공한 중국지진청(C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9도, 동경 123.97도이며 수심 깊이는 12km다.

이번 지진은 국외지진정보발표 기준(규모 5.5 이상)에 미달했지만, 지진이 서해에서 발생하면서 다수의 광주·전남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소방본부에 13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으며, 전남도소방본부에도 목포, 영광 지역을 중심으로 8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어낼 판

### 법원 “돈 돌려줬지만 추징금 내야”

아파트 분양·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받은 돈의 두 배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2개월·추징금 90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원심대로 9000만원의 추징금을 유지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받은 돈 9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하면 1심(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지만 받은 돈만큼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아파트 분양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알고 지내던 나주시청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모 건설사 이사 B씨로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2월, 나주시청 직원에게 아파트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B씨 요청을 받고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겼고 금액, 알선행위,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에 상응하는 금액이 반환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황주홍 전 의원 5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속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수습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의원은 또 법외계열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검찰 수사 이후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